

중국,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

전병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jubykon@kinu.or.kr

I. 서론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대)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는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당대회로서 향후 5년(2017~22년) 간 중국을 이끌 지도이념과 대내외정책 기초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의 주된 관심사는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맞이한 시진핑의 권력성격과 지도부의 교체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 향배와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 또한 주된 관심사였다. 즉, 시진핑 권력의 공고화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 시진핑의 후계자가 확정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시진핑의 권력체계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등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초보적인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대의 결과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시진핑 2기의 북중관계는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19대 보고에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바, 19대 보고의 대외전략적 함의와 시진핑 1기의 북중관계 회고를 결합해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북중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제19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그 결과와 의미를 평가하고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시진핑 집권 1기의 북중관계를 회고한 후, 19대 이후 북중관계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가 한중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제19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주요 내용

10월 24일 폐막된 19대에는 전국의 8,900여 만명의 중국공산당 당원을 대표하는 2,280명과 특별초청 대표 74명 등 2,354명 중에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16명을 제외한 2,338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는 18기 7중전회(10월 11~14일)에서 마련한 초안을 청위, 심의하고 중국공산당 장정(이하 당장)의 수정안을 의결한 후, 새로운 임기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어 25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제1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는 사실상의 중국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의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원 등을 선출하였다.

가. 19대 보고의 핵심: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금번 19대 보고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 관례대로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이 직접 연설한 19대 보고는 15대(1997년) 이후 가장 많은 분량과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관한 설명에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대 기간 중국공산당의 주요 전략방향으로 각 분야에 반영되어 나타났다.¹⁾

먼저, 서문에서는 대회의 주제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깊이 새겨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소강(小康)사회 전면 건설에 결정적으로 승리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를 제시했다. 이러한 장문의 주제에서 보듯이,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집권 1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 국내외 정세를 전략적 기회와 도전에 직면한 관건적 시기로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로의 돌입을 위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시대란, ① 과거 중국혁명과 개혁개방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해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 ②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실현함으로써

1) 이하에서는 다음의 19대 보고를 주로 참고하였다.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17. 10. 26).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의 길로 진입하는 시대, 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는 시대, ④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시대, ⑤ 세계무대의 중앙에 진입해 인류에 더 많은 공헌을 하는 시대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신시대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불균등·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규정했던 ‘인민의 선진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와 낙후한 생산력’ 간의 모순에서 중국의 현실을 새롭게 반영한 상황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당시 덩샤오핑은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에 기반해 1990년까지 인민의 먹는 문제 해결, 2000년까지 소강 수준 달성,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이란 소위 ‘3단계 발전론(三步走)’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했는데, 19대에서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새롭게 규정한 점은 덩샤오핑의 통치사상과 전략을 계승하되,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공산당이 이번 19대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통치이념으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는 중국공산당의 당헌(黨憲)인 당장(黨章)에도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새로 삽입되었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도 구체화되었다.

이 점은 19대 보고에서 두 개의 100년을 제시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100년은 중국공산당 창당(1921년) 100주년을, 두 번째 100년은 건국(1949년) 100주년을 지칭한다. 19대 기간(2017~22년)은 이 두 개의 100년이 중첩·교차하는 과도적이고 관건적 시기인바, 2020년까지 소강사회의 전면실현을 목표로 해왔던 중국공산당이 그 이후 새로운 목표와 단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금번 대회의 보고에 반영되었다. 다시 말해서, 19대 기간 중 소강사회의 전면실현을 통해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2021년부터 2049년까지 두 번째 100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은 2020년부터 2개의 단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1단계의 목표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이며, 인민의 공동부유 실현과 선도적인 혁신형 국가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2단계의 목표는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부강, 민주,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이며,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하는 국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소강사회의 전면 건설(2020년) →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2035년) → 전면적인 사회주의현대화 강국 건설(2050년)이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향후 대내외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이다.

나. 지도부 인선 결과

19대에서는 새로운 임기 5년의 중앙위원 204명과 중앙위원후보 172명을 선출하였다. 중앙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이었던 18대와 대동소이하다. 이어 개최된 19기 1중전회에서 정치국원 25명을 선출했는데, 이들 중 중국의 최고 정책결정 그룹인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정치국은 1년에 통상 1, 2회의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폐회기간 동안 중국공산당과 중국을 경영하는 핵심 지도부라 할 수 있다.

16기와 17기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9인체제였으나, 18대에 7인체제로 축소되어 이번 19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의 독주를 위한 7인체제의 5인체제로의 축소설이 확산되기도 했었지만, 결과는 7인체제의 유지였다. 다만, 권력서열 1, 2위인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67세 유임, 68세 퇴직(七上八下)’이라는 관행에 따라 전원 교체되었다(표 1 참조). 반면,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위한 차기 지도자를 내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전통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50년대 생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후계자로 지목될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표 1〉 중국공산당 제19기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성명	출생 년월	연령	학력(학사)	19대 직위	비고
1	시진핑 (習近平)	1953. 6	64	청화대학 인문사회학부 법학박사	국가주석, 총서기, 중앙군사위주석	유임
2	리커창 (李克強)	1955. 7	62	북경대학 경제학원 경제학박사	국무원 총리	유임
3	리잔수 (栗戰書)	1950. 8	67	하북사범대학 정치교육과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신임
4	왕양 (汪洋)	1955	62	중앙당교 이론선전간부반	전국정협 주석	신임
5	왕후닝 (王滬寧)	1955. 10	62	상해사범대학 푸단대학 국제정치 석사	중앙서기처 서기	신임
6	자오러지 (趙樂際)	1957. 3	60	북경대학 철학과 중앙당교 석사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신임
7	한정 (韓正)	1954	63	화동사범대학경제학석사	국무원 상무부총리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의 직무와 관련, 18기와 마찬가지로 7인체제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직무 배분도 커다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유임된 권력서열 1, 2위의 직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3위인 리잔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을, 4위인 왕양은 전국정협 주석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위인 왕후닝은 중앙서기처 서기로, 6위인 자오러지는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선출되었다.

〈표 2〉 중국공산당 제19기 정치국위원(정치국 상무위원 제외)

성명	출생 년월	연령	출신지	학력(학사)	비고
당쉐샹 (丁薛祥)	1962. 9	55	장수	푸단대학 행정관리 석사	신임
왕첸 (王晨)	1950. 12	67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석사)	신임
류허 (劉鶴)	1952. 1	65	허베이	인민대 석사 하버드 MPA	신임
쉬치량 (许其亮)	1950	67	산둥	공군 제5 항공학교	유임
순춘란(여, 孙春兰)	1950	67	허베이	중앙당교 석사	유임
리시 (李希)	1956. 10	61	간수	서북사범학원	신임
리장 (李强)	1959. 7	58	저장	중앙당교 석사	신임
리홍중 (李鸿忠)	1956. 8	61	산둥	길림대학 역사학과	신임
양제츠 (杨洁篪)	1950. 5	67	상하이	남경대학 역사학과	신임
양샤오두 (杨晓渡)	1953. 10	64	상하이	중앙당교 석사	신임
장여우샤 (张又侠)	1950. 7	67	산시	군사학원	신임
천시 (陈希)	1953. 9	64	푸젠	칭화대학	신임
천취안궈 (陈全国)	1955. 11	62	허난	우한이공대학 관리학박사	신임
천민얼 (陈敏尔)	1960. 9	57	저장	중앙당교 법학석사	신임
후춘화 (胡春华)	1963	54	후베이	북경대학 중문과	유임
귀성군 (郭声琨)	1954. 10	63	장시	북경과학기술대학 관리학박사	신임
황군밍 (黄坤明)	1956. 11	61	푸젠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신임
차이치 (蔡奇)	1955. 12	62	푸젠	북경사범대학 경제학박사	신임

자료: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분석』, 2017. 10. 26. pp. 9~10.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표 2〉에서 보듯이, 정치국원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 쉬치량, 순춘란, 후춘화 등 3인이 유임되고 나머지 15인이 새로 선임되었다. 이는 18기 정치국원 교체비율과 같은 비율이지만, 연령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런 점에서, 6세대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덩쉐샹, 천민얼, 후춘화가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나 시진핑의 후계를 이을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 정치국원 중 주목되는 인사는 양제츠 현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발탁이다. 지난 1992년 14대에서 첸치천(錢其琛)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어 외교담당 부총리로 10년을 재임한 이후 처음 있는 사례이다. 미국통인 양제츠가 정치국원에 선출되었다는 점은 대미관계를 위한 중국의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외교담당 부총리를 맡을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 밖에 순춘란과 후춘화도 내년 전인대에서 부총리로 임명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 평가

가. 시진핑 시대의 공식화

금번 19대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 2기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18기 6중전회에서 당의 핵심으로 등극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지도체제라는 중국정치의 관례를 깨고 권력을 개인에게 집중시킨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살아 있는(즉, 2기가 보장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오랜 노선투쟁의 경험과 다양한 파벌의 상호 견제 및 원로(후견)정치 등이 복합된 당내 전통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각에서 예측했던 마오쩌둥 시기의 당 주석제가 부활되지 않고 당 총서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점, 정치국 상무위원의 7인체제가 지속된 점, 68세 퇴직 연령의 관행이 실행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 내에 집단지도체제의 관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관성은 역사적 전통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중국적 특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념, 중국공산당의 지배, 안정적 통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당내 합의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 개인독재에 대한 덩샤오핑의 개혁에서 출발해 장쩌민, 후진타

오 시기를 거치면서 진전된 당 내 개혁과 제도화가 시진핑 시기 들어 점점 후퇴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19대에서 ‘격대지정’의 관례가 깨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시진핑의 후계자를 내정하지 않고 열어둠으로써 향후 경쟁을 통해 차기 지도자를 선발할 것이라는 해석과, 당 내에서 후계자 지명을 위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시도할 경우, 국가지도자급 직위의 3선 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으로 이행할지, 후계 경쟁구도로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어느 구도로 가던 후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의 당내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상징적인 사례로서 금번 19대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16차 지도이념)’이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당장에 명기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 기존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삼개대표론, 과학적 발전관 등인데, 새로 추가된 16차 지도이념엔 시진핑의 이름이 명기된 데다가 ‘사상’으로 까지 명명되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덩샤오핑을 넘어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랐다는 과도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본래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은 당의 집체적 결정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한 평가는 지나치게 성급한 해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19대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시진핑의 이름이 병기되었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정책성과에 따라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 즉 시진핑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19대 지도부의 인선 결과는 시진핑의 독주체제가 어느 정도 구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리잔수, 왕후닝, 자오러지 등이 친시진핑계로 분류되고, 정치국원 중 상당수가 시진핑의 측근이거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인사들로 평가되고 있다.²⁾ 따라서 시진핑 2기체제는 1기체제에 비해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공고화·집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법과 제도에 의한 공식정치(formal politics)보다 당 내 합의에 의한 비공식정치(informal politics)가 여전히 유효하며, 일당 지배체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중국정치의 특성을 감안하면, 시진핑 시대의 출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분석』, 2017. 10. 26. p.8.

나. 대내외정책 방향

중국은 제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2기체제가 출범할 예정이다. 물론 본격적인 출범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제19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들의 국가기구 및 정부 요직이 확정된 이후가 되겠지만, 당-국가체제(party-states system)인 중국의 특성상 당대회의 주요 전략방향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19대 보고의 핵심 내용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다. 여기에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의 길과 방법(전략과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³⁾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은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당의 영도능력 강화,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치리(治理)체계의 현대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와 법치국가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보고에서도 언급된 반부패 국가입법과 국가감찰법을 통해 반부패정책의 지속적 강화가 예상되며, ‘의법치국(依法治國)’ 관련 중앙영도소조도 새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사회주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원천인 국방분야에 대한 개혁과 현대화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가 되기 위한 신시대의 ‘강군몽(強軍夢)’ 실현을 위해 군 현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주목되는 것은 현대화된 육, 해, 공, 미사일 및 전략 지원부대의 건설과 고효율의 전구(戰區) 연합작전 지휘기구 설치이다.

경제분야에서는 현재 중국의 경제는 양적 성장단계에서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향후 경제발전 방식과 경제구조 및 성장 동력을 전환해야 하는 관건적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는 과학기술의 혁신 주도와 민생 중심의 소비 주도 경제성장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대외정책분야에서, 중국은 신시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주창하고 있다.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란,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19대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평화 수호 및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 기조하에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해 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존중, 공평정의, 상생협력의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하고, 각국 인민과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다.⁴⁾ 이를 통해 보면,

3) 중국은 향후 새로운 목표와 단계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14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당의 영도, 인민중심, 심화개혁, 신발전이념, 인민주권, 의법치국,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 민생개선과 보장,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국가안전관, 당에 의한 군대 영도,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엄격한 당 관리 등이다. 「關於十九大報告,你必須知道的關鍵詞」(<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18/c414305-29595155.html>, 검색일: 2017. 10. 28).

<표 3> 19대 보고에서 언급된 10대 유망분야

주요 방침	주요 전략	유망 분야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공급측 개혁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선진제조업,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녹색저탄소, 고유 경제, 현대서비스업 - 인프라 분야(수리, 철도, 도로, 항공, IT, 물류 등) - 소비재산업
혁신형 국가 건설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대중창업, 민중혁신	- 공유경제, IT, 전자상거래 - 지적권보호 관련 서비스 - 스타트업 분야 - 스마트 시티
향촌 진흥	삼농	- 현대농업, 6차산업, 현대 유통업 - 인프라 분야(수리, 철도, 도로, 항공, IT, 물류 등)
지역조화 발전전략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징진지, 송안신구 도시화	- 인프라 분야(수리, 철도, 도로, 항공, IT, 물류 등) - 해양산업 - 빈곤탈피 - 스마트시티
사회주의 시장경제	경제개혁 전면심화	- 자유무역구, 자유무역항 - 국유기업 개혁(혼합소유제) - 현대서비스업(법무, 재무, 지적권 관련)
전면 개방추진	일대일로	- 현대서비스업(법무, 재무, 지적권 관련) - 인프라 분야(수리, 철도, 도로, 항공, IT, 물류 등)
사회주의 문화육성	-	- 문화콘텐츠, 스포츠산업 - 레저 산업(캠핑장 건설, 캠핑용품 등)
민생보장	빈곤탈피	- 교육산업 - 금융산업(양로보험) - 주택 개조관련 인프라 분야
건강한 중국	건강중국2030 식품안전 강화	- 의료보건(의료기기, 의약품, 보건시금 등)
아름다운 중국	녹색발전	- 친환경, 녹색저탄소, 환경보호산업, 자연생태복원산업 - 녹색생산, 녹색 소비 육성 - 환경기술, 청정에너지 산업 등

자료: 김윤희, 「중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 ③ 신시대, 주목해야 할 신성장분야」,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10. 27. p. 2.

신형국제관계의 핵심은 상호존중, 공평정의, 상생협력이고, 인류운명공동체는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전, 공동번영, 포용개방,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 등 5개 세계의 건설을 의미한다.⁵⁾

그동안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해 왔는데, 이는 주로 미국 등 강대국관계를 중시한다는 점과 자신을 대국으로 지칭하는 점으로 인해, 강대국과의 마찰은 물론 주변의 중·소국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신형국제관계는 이러한 현실적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친밀(親)·성실(誠)·호혜(惠)·포용(容)’의 우호협력과 공평

4)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 검색일: 2017. 10. 26).
5) “王毅談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總目標: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http://www.mfa.gov.cn/ce/cemx/chn/xw/t1503111.htm, 검색일: 2017. 10. 27)

을 강조하는 대주변국 외교의 기초를 금번 19대에서도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사회주의 강국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 ‘중국위협론’이 부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고려한 표현과 내용이라 판단된다. 신시대의 중국은 세계의 중심에 진입해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향후 책임대국의 역할 수행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UN의 역할 중시, 글로벌 관리체계의 개혁과 건설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표현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규범 경쟁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은 절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와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꿈은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⁶⁾ 이는 중국이 18대에서 명기한 핵심 이익(주권, 영토, 발전이익)으로 인해 이익지향적 외교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고려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국익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이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으로 표현되는 민족주의와 더 강력해진 시진핑의 리더십과 결합될 경우, 시진핑의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III. 시진핑 집권 2기의 북중관계 전망

1. 시진핑 집권 1기의 북중관계

제18차 당대회(2012년 11 ~ 2017년 10월) 기간에 해당하는 시진핑 집권 1기의 북중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핵실험이 4차례나 있었고, 이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이견과 마찰은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와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북중관계가 악화되었다. 북한은 핵·경제 개발의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설정하고 대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궤도로 유도하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6)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http://cpc.people.com.cn/17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17. 10. 26)

김정일 시기의 북중관계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기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채널의 단절 또는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기의 잦은 인사 교체와 숙청은 중국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제약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북한의 장성택 숙청(2013년 12월)이다. 북중경협을 총괄하던 장성택의 숙청은 그나마 유지되던 북중 소통 채널과 경협의 악화를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음으로써 김정일 시기 유지되었던 양국 간 정책협력의 동력도 상실되었다. 더욱이 양국의 정치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외교는 북중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전례를 깨고 2014년 7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불만과 불신도 커져 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국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근원은 비핵화 문제였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 보유를 선친의 업적 계승이자 자신의 통치자산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핵 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⁷⁾ 게다가 북한의 입장에서 핵 보유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유지, 대내 결속 및 외부 위협에도 유용한 사활적(vital) 문제였다. 다만, 민생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과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기대했을 뿐이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주변 질서 형성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한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정책을 조정하였다. 이를 가속화시킨 것은 북한의 잇단 핵실험이었다. 2013년 2월 감행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시진핑 체제가 막 출범하던 시기여서,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위기고조 행위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증대된 자국의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례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였다.

이후 북한이 중국의 압박과 경고를 수용하면서 양국 간 단절되었던 소통 채널도 일시적으로 복원되기도 했다. 특히 한중관계의 개선과 북중관계의 악화가 중국의 국익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중관계의 개선 못지않게 북중관계의 안정화도 중국의 국익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북한의 지정학적 안보가치와 대미일관계 설정에서 북한카드의 유용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북한의 위기고조 행위나 급변 상황의 발생 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중국 권력서열 5위인 류원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함으로써 북중관계의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그해

7)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라는 제하의 노동신문 사설을 보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조국을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우신 것은 민족민대의 운명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담보를 마련하신 특출한 민족사적 공적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노동신문』, 2011. 12. 24).

12월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돌연 취소된 후,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감행되면서 북중관계도 다시 경색되었다.

중국은 3월 2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인 2270호에 찬성한 후, 4월 5일 그 구체적인 이행조치로서 대북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발표하였다.⁸⁾ 이어 6월 14일에는 40여 개 품목과 기술을 새로 추가한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도구와 관련한 이중용도물품 및 기술의 북한 수출 금지’ 목록을 발표하였다.⁹⁾ 이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수출금지 목록 발표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던 제3차 핵실험 당시와 비교하면, 추가조치까지 모두 3개월 만에 이루어진 매우 빠른 조치라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조치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대국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중국책임론’에서 벗어나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제재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제재수단론’을 강조한 점이나,¹⁰⁾ 북한의 민생이나 인도주의를 위한 예외조항을 2270호에 반영시킨 점 등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북중관계를 고려하며 대북제재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¹⁾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논의 제안은 중국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6년 5월 북한의 제7차 당 대회 개최와 김정은의 당위원장 추대에 대한 축전에서 북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¹²⁾ 북한은 당대회 직후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및 국제부 부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북한의 민생을 강조하면서 북중관계를 관리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아울러 중국은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북핵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중 견제용으로 인식하며 반대하였다.¹³⁾ 이에 따라 사드를 둘러싼 한미일과 중러의 인식 차이와 갈등은 중국의 대북제재

8) “商務部, 海關總署公告2016年第11號關於對朝鮮禁運部分鑛產品清單公告”, 2016. 4. 5(<http://big5.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9770.shtml>, 검색일: 2016. 7. 15).

9) “商務部, 工業和信息化部, 國家原子能機構, 海關總署公告2016年第22號-關於增列禁止向朝鮮出口的兩用物項和技術清單公告”, 2016. 6. 14(<http://big5.mofcom.gov.cn/gate/big5/www.mofcom.gov.cn/article/b/c/201606/20160601338628.shtml>, 검색일: 2016. 7. 30)

10) “2016年1月27日外交部發言人華春瑩主持例行記者會”(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335551.shtml, 검색일: 2016. 2. 3).

11) “2016年2月26日外交部發言人洪磊主持例行記者會”(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343501.shtml, 검색일: 2016. 8. 11).

12) “中共中央致電祝賀朝鮮勞動黨七大召開”, 『人民日報』, 第1版: 2016. 5. 7; “習近平致電祝賀金正恩被推舉為朝鮮勞動黨委員長”, 『人民日報』, 第1版: 2016. 5. 10.

13) 2016년 7월 8일 한미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할 직후,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는 한편, 역대 중국 안보의 전략적 이과 균형을 훼손하는 사드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中國外交部聲明”(2016. 7. 4),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和國務院新聞辦公室關於朝鮮半島局勢的聯合聲明”(<http://www.fmprc.gov.cn/web/zyxw/t1475362.shtml>, 검색일: 2017. 7. 6).

이행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면서 북중관계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미국과의 경쟁과 협력관계의 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9월 9일 북한 건국절에 맞추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중관계도 다시 냉각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보완해 대북 석탄 수출액과 수출량 제한을 명시한 2321호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북중관계의 악화를 초래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이었다. 즉, 미국은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강경한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중국을 활용한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을 추진하였다.¹⁴⁾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제재 강화와 미국의 대중 경제압박 완화가 합의되면서 중국은 대북제재 강경책으로 선화하였다.

이에 따라 북중관계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북한은 중국이 자국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고, 북중 친선관계를 핵과 교환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북중관계의 레드라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과시하며 7월 ICBM 시험 발사와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물론 중국은 대미관계를 고려해, 이전보다 더 강화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찬성하고 준수하며 대북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만 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된 2356호, 2371호, 2375호의 내용에는 북한의 철광석 및 석탄 수출 전면 금지,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 금지, 정유제품의 대북수출 200만배럴 제한,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허가 금지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시진핑 집권 1기의 북중관계는 양국이 갈등의 부분적인 완화와 협력 모색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갈등 심화와 악화로 전개되었다.

2. 시진핑 집권 2기의 북중관계: 지속과 변화

가. 지속적 측면

19대의 결과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지속에 방점을 두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한반도정책의 기조는 유지·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대의 기간은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중국이 매우

¹⁴⁾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전략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으로 요약되는데,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최대화하는 한편,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중시하는 관건적이고 전략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은 안정적인 외부환경과 자국 주도의 질서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진적이고 전략적으로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반도정책의 기초하에서 보면,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변화의 측면보다 지속적인 측면이 우세할 것이다. 북한의 평화와 안정, 북핵 보유 반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기존의 대북정책 목표도 단기간에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지정학적·안보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급격한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책임대국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UN을 통한 대북제재도 지속할 것이나, 단독제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동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의 대북제재 범위와 강도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북중관계의 악화 추세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북핵을 반대하나, 대미관계의 하위에서 한반도의 안정 및 영향력 유지를 위해 제재를 추진하되, 북한체제의 붕괴나 혼란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일의 대중견제에 대응하는 한편,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에도 기존 북핵과 북한을 분리한 대화와 제재의 투 트랙 접근이나 대화에 방점을 둔 북핵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즉, '쌍궤'와 '쌍잠정중단'의 정책 역시 고수할 것이다. 한반도문제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에 의하면, 투 트랙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협상이며, 구체적 로드맵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대화 개시→무력 불사용, 불가침, 평화공존의 총원칙 확정→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일괄타결(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기제)→관계 정상화이다.¹⁵⁾

이처럼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 대화국면을 조성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제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당분간 시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지속되는 한 북중관계의 마찰과 갈등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변화의 가능성

그러나 북중관계가 변화할 여지도 존재한다. 19대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시진핑

15) 「中國外交部聲明」(2016. 7. 4),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和俄羅斯聯邦外交部關於朝鮮半島問題聯合聲明”(http://www.fmprc.gov.cn/web/zyxw/t1475362.shtml, 검색일: 2017. 7. 6).

2기 지도부의 대내외 정책적 과제는 신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 경제발전과 자국에 유리한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주변 환경 창출과, 자국의 이념과 가치, 이익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질서의 재편이다.

이는 중국이 평화협력적인 대외전략 기조를 유지하되,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질서 형성을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점은 중국의 한반도정책 및 북중관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북중관계는 두 개의 변화방향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관건적 시기와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이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북제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중국은 미중 경쟁구도 여하에 따라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유지할 것이나, 북한 변수가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측면과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동시에 강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할 것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붕괴를 야기하는 수준의 조치나 대북 군사옵션 사용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경한 대응으로 통제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을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게 통제, 유도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 관여(engagement)정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영향력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¹⁶⁾ 이렇게 강화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할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안정 유지와 같은 안보이익을 더 우선하면서, 남북대화 및 북핵 관련 회담 재개를 통한 대북제재의 완화 등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의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모두 북한의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북한이 현 상황에서 내부단속에 주력하면서 관망할 경우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중관계는 현 구도를 유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이다. 북한이 자기의 시간표대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중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협력은 중단될 것이나, 만일 북한이 대화를 선택한다면 북중관계는 소통 채널이 복원되고 협력관계도 일정 수준 회복될 것이다.

16)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1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보낸 제19차 당 대회 축전과 10월 26일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시진핑에게 보낸 축전은 주목된다. 물론 북한의 축전이 의례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는 북중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때문이다(『노동신문』, 2017. 10. 18. 2면과 『노동신문』, 2017. 10. 26. 1면).

IV. 결론

이상에서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보고의 주요 내용과 지도부 인선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의 통치이념으로 확정되었고, 시진핑 계열의 신 지도부 진입 폭이 크고 후계자가 지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권력기반은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19대 기간을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실현과 소강사회의 전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로 규정하고, 21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당 주도의 혁신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통해 평화와 상생의 글로벌 질서 형성에 건설적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시진핑 2기가 완성되는 내년 3월 이후 북중관계는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변화의 여지도 있는데, 지금과 같이 중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 내지 강화할 가능성과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 관여정책을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단언하기는 곤란하지만, 분명한 점은 북중관계가 미중관계의 변화에 더 깊고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북중관계는 미중협력과 경쟁관계를 주시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중갈등이 증폭될수록 우리의 역할 공간도 축소될 수 있으며 미중협력이 증가하면 우리의 이익이나 입장과 무관하게 전개될 개연성도 큰 만큼, 우리의 역할 공간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중요하다.

북중관계의 악화 속에서는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해야 하며, 북중관계의 호전은 대북제재 효과 및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측면이 있는바, 북중관계가 견고하게 발전되지 않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북중관계의 호전은 대화국면 조성과 북한 변화 유도에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바, 한중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19대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대국외교의 핵심인 신형국제관계의 추진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근 56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연장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점은 한중관계 개선의 긍정적 분위기를 시사하며,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도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중협력의 필요성이 있고, 세계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경제의 공헌자, 국제질서의 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중국 역시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와 한국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계도 가능한바, 향후 신형 한중관계를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종합분석」, 2017. 10. 26. pp. 9~10.
- 김윤희, 「중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③신시대, 주목해야 할 신성장분야」,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7. 10. 26.
-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17. 10. 26).
- 關於十九大報告,你必須知道的‘關鍵詞’”(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18/c414305-29595155.html, 검색일: 2017. 10. 28).
-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17. 10. 26).
- “王毅談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總目標: 推動构建人類命運共同體”,(http://www.mfa.gov.cn/ce/cemx/chn/xw/t1503111.htm, 검색일: 2017. 10. 27.)
-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17. 10. 26).
- “商務部,海關總署公告2016年第11號關於對朝鮮禁運部分鑛產品清單公告”, 2016. 4. 5 (http://big5.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9770.shtml, 검색일: 2016. 7. 15).
- “商務部,工業和信息化部,國家原子能機構,海關總署公告2016年第22號:關於增列禁止向朝鮮出口的兩用物項和技術清單公告”, 2016. 6. 14(http://big5.mofcom.gov.cn/gate/big5/www.mofcom.gov.cn/article/b/c/201606/20160601338628.shtml, 검색일: 2016. 7. 30).
- “2016年1月27日外交部發言人華春瑩主持例行記者會”(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335551.shtml, 검색일: 2016. 2. 3).
- “2016年2月26日外交部發言人洪磊主持例行記者會”(http://www.fmprc.gov.cn/web/

wjdt_674879/fyrbt_674889/t1343501.shtml, 검색일: 2016. 8. 11).

『中國外交部聲明』(2016. 7. 4),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和俄羅斯聯邦外交部關於朝鮮半島問題的聯合聲明”(http://www.fmprc.gov.cn/web/zyxw/t1475362.shtml, 검색일: 2017. 7. 6).

<언론 기사>

『노동신문』,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선군 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2011. 12. 24.

『노동신문』, 2017. 10. 18. 2면.

『노동신문』, 2017. 10. 26. 1면.

『人民日報』, 「中共中央致電祝賀朝鮮勞動黨七大召開」, 2016. 5. 7. 第1版.

『人民日報』, 「習近平致電祝賀金正恩被推舉為朝鮮勞動黨委員長」, 2016. 5. 10. 第1版.